“여수산단 공사현장서 100억 대 임금체불”

여수시청에서 기자회견 열고 임금체불 대책 촉구

원청사 “공사비 이미 지급…하청사 경영 악화가 원인”

25일 전남 여수시청에서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여수지부가 집회를 열어 여수산단 내 3곳의 건설현장의 임금체불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공장신증설이 한창인 여수국가산단에서 전문건설사 3곳이 100억 원대의 임금을 체불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여수지부는 여수시청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수산단 내 3곳의 건설 현장에서 일한 전문건설업체 3개사의 직원이 설을 앞두고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총 101억 9575만 원의 임금이 체불됐으며 피해를 본 조합원 수는 2000여 명이며 공사가 마무리돼가는 시점에 연례행사처럼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어 “임금체불은 공사를 발주하는 과정서 적정금액에 입찰하지 않고 최저낙찰제를 통해 전문건설업체 간 경쟁을 유도해 공사금액을 낮추는 발주처와 원청사에 있으며, 최저낙찰제를 통해 공사를 입찰받은 전문건설사는 추가 공사 금액을 핑계로 이익을 챙겨가는 구조적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분석했다.

노조는 “임금을 볼모로 전문건설업체와 발주처 및 원청사 간의 추가공사 금액을 협의하는 힘겨루기 과정서 임금체불의 피해는 플랜트 건설 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1990명의 노동자가 101억 9575만 원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플랜트 건설노조에 따르면 GS칼텍스 1공장의 경우 GS건설이 시공하고 전문건설업체는 H플랜트가 계약했으나 230명에게 11억 2248만 원을 지급하지 못했다.

GS건설이 시공한 GS칼텍스 2공장은 H플랜트가 18억 5327만 원을 370명에게 지급하지 못했다.

또 GS-MFC 공장 신설 현장의 경우 GS건설이 시공하고 전문건설업체는 I산업과 D건설이 각각 계약했으나, I산업은 960명에게 47억 7000만 원을, D건설은 430명에게 24억 5000만 원을 체불했다.

노조의 임금체불 주장에 대해 발주처와 원청사는 인건비를 포함해 지급할 수 있는 공사비는 이미 전달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원청사 관계자는 임금체불에 대해 “공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3개사가 경영악화를 호소해 긴급 지원책을 실행하고 있다”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검토 후 원활한 공사 마무리와 협력사 상생을 위해 추가 공사비 지급 금액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광주글로벌모터스 신축 현장서 또 산재 사망…진상 규명을”

“박광태 대표, 자진사퇴하고 광주시도 재발방지책 수립해야”

광주·전남 지역 노동단체가 25일 ‘광주형일자리’ 완성차 공장 신축 현장에서 잇따르고 있는 건설노동자 산업재해 사망 사고에 대해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통한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는 이날 오후 광주 서구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3일 광주글로벌모터스(GGM) 공장 신축 현장 내 5m 높이 작업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다. 예방 대책을 소홀히 하고 안전 불감증에 빠진 박광태 대표이사가 직접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8월 60대 노동자가 고가사다리차에 치여 숨진 데 이어 2번째 산업 재해 사망 사고다”며 “박 대표이사는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 GGM의 1대 주주가 광주시인 만큼, 이용섭 시장도 이번 사고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지난해 9월 제정된 ‘광주시 산업안전보건지원 조례’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이번 사고 조사 뿐만 아니라, 일상적 노동 안전을 점검할 수 있도록 노조·시민사회 전문가가 참여하는 ‘안전보건지킴이단’을 운영해야 한다”고 했다.

광주선관위, 설명절 선거법 위반 예방·단속활동 강화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설 명절을 맞아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과 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내년 3월과 6월에 대통령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어 올해는 선거법 안내·예방활동에 주력하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입후보예정자 등이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나 명절인사를 빙자해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가 적발 대상이다.

또 선거운동 목적의 집회를 개최해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나 입후보예정자가 버스 안이나 터미널 개찰구 안에서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등은 할 수 없다.

다만, 정당·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선거일 전 180일 전에 의례적인 명절인사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나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입후보예정자가 선거일 전 180일(대통령선거의 경우 240일)부터 홍보사항이 적힌 명함(길이 9cm 너비 5cm 이내 규격)을 직접 주는 행위는 허용된다.

공직선거법 제261조에 따르면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000만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다.

광주선관위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라며서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인호 기자

멧돼지 사냥 중 동료 탄환 어깨 맞은 60대 병원 이송

25일 오전 11시37분께 전남 구례군 용방면 한 야산에서 멧돼지를 사냥하던 60대 주민 A씨가 일행이 쏜 엽총 탄환에 맞았다.

이 사고로 A씨가 어깨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웃과 함께 엽총을 들고 멧돼지 사냥을 나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일행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해삼 불법 채취’ 어선 추격전 중 좌초…무사 구조

전남 장흥 해상에서 해삼을 불법 채취한 뒤 달아나는 어선과 이를 쫓던 양식장 관리선이 잇따라 좌초됐으나 해경에 의해 구조됐다.

25일 완도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0시30분께 장흥군 회진면 장재도 남동쪽 인근 해상에서 3.6t급 양식장 관리선 A호와 3t급 어선 B호가 암초에 걸려 침수 중이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완도해경은 경비함정·연안구조정·장흥 민간구조대 소속 선박 등을 현장에 급파, 승선원과 선박의 안전을 확인했다. 다행히 별다른 인명피해는 없었다.

A호는 자체 보강 수리를 마치고 자력 항해키로 했으며, B호는 부력 공급용 공기주머니(리프트 백) 등을 이용해 안전 조치를 마쳤다. B호는 만조 때를 맞춰 예인 작업을 할 방침이다.

앞서 B호는 여수 득량도 인근 양식장에서 해삼을 불법 채취하다 어민들에 발각, 도주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호 등 양식장 관리선 3척이 B호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낮은 수심을 미처 확인 못한 두 선박이 좌초된 것으로 해경은 추정했다.

완도해경은 정확한 좌초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불법 조업 혐의를 받는 B호 선장을 수사할 방침이다.

불법 유턴 SUV, 오토바이 운전자 치고 도주…경찰 수사

광주에서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다치게 한 SUV차량 운전자가 달아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5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6시께 광주 서구 서창동 한 편도 2차선 도로에서 SUV차량이 유턴을 하다가 반대편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던 A(47)씨를 치고 달아났다.

이 사고로 A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SUV차량이 중앙선을 무단으로 넘어 유턴을 하던 중 난 사고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도주 차량을 특정, SUV 운전자 검거에 나섰다.

경찰은 운전자를 붙잡는 대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또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한다.

“코로나 걱정돼” 출입 만류한 경찰 폭행…1심 집행유예

“코로나19 위험이 있다”며 병원 출입을 막은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유창훈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문모(48)씨에게 지난 14일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문씨는 지난해 8월12일 새벽 6시께 서울 용산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경찰의 목 부위를 손으로 때리고 가슴을 수차례 밀친 혐의를 받는다.

문씨는 경찰이 “응급실 내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환자가 있어 위험하니 들어가지 말라”고 만류하자 이 같은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병원에서는 “술을 마신 보호자가 소란을 부린다”며 경찰을 불렀던 것으로 파악됐다.

유 부장판사는 “범행경위가 좋지 않고 동종 처벌전력도 있다”며 “다만 사리분별력이 다소 저하된 상태였고 피해 경찰관이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말했다.